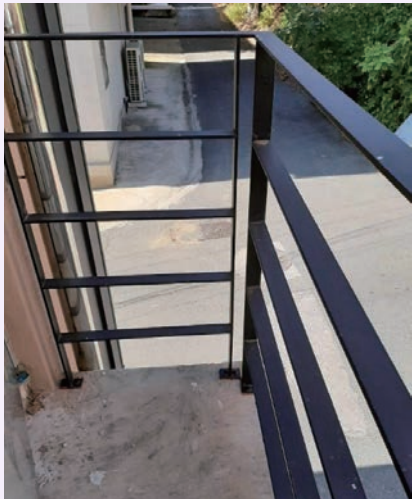


정부, 화재안전 및 예방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023. 8. 21.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조사과
2023. 7. 3.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
2023. 7. 31.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 사진

출처: 소방청. (2023).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없도록 안전성 강화. 7월 31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화재안전 위한 법령 개정 및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춰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필수요소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며, 내화재용구조와 방화담퍼 설치 등을 통해 방화구획의 화재확산 방지 성능을 제고하였다. 또한 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열감지기 대신 특수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난연 이상 자재로 내부마감을 하도록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5일 출범한 재난원인조사반은 민간전문가 6명과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여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분석·조사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시설의 화재 취약성 ▲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아케이드 안전성 강화와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율적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책임성 강화 등을 포함하는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 위한 법령 개정 및 공포

소방청은 노후된 발코니형 비상구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남성 약 7명이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 기준을 마련하고, 영문 혼용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정 개선을 포함한다.